

【해외동향】

제7회 국제제노사이드학회에 다녀와서

김 동 춘*

1

지난 7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구 유고연방)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열린 제7회 국제제노사이드학회(Seventh Biennial Meeting,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nocide Scholars)에 다녀왔다. 이 행사는 북미지역의 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제노사이드학회가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학술행사이지만 단순하게 학술연구자들만이 참석하는 행사는 아니고 정책담당자, NGO 활동가, UN 등 국제기구 종사자 등을 참석시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살의 현황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공동행동 등 대책도 마련하는 약간의 실천적인 활동도 하는 모임이다.¹⁾ 나는 이 행사에 두 번째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2003년 아일랜드의 갈웨이(Galway)에서 열린 제5회 행사에 참석한 적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1) 국제제노사이드 학회 공식 홈페이지는 <http://www.isg-iags.org/>이므로 이 학회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 참가자 발표에 대한 간단한 요약집이 발간되었다.

있었고,²⁾ 그 이후 4년이 지난 올해에 참석한 셈이다.³⁾ 그 때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던 중 우연하게 그러한 학회와 학술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전쟁 시기 학살사건을 국제학회에서 외국 학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참석하였고, 한번 그쪽과 인연을 맺게 되니 계속 이 메일 연락이 오고해서 올해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내가 한국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어 한국전쟁기 학살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책임을 맡게 되어 각국의 학살관련 진실규명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다. 2003년 아일랜드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에는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서 (아시아권에서 참석한 사람은 일본인 1명뿐이었음) 차후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사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출발 이전의 참석자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사이 한국에서도 제노사이드 학회가 만들어지고 학살 문제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높아졌으며 관련 연구자들도 늘어났지만, 이번에도 이 국제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행사 준비 측에서 보내온 이 메일을 보니 발표자나 참석자의 90% 이상은 2003년 행사와 별로 다르지 않게 유럽, 미국 학자, 활동가들 중심이었다.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석원호 박사가 같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사라예보 행사 이전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참관 일정이 있어서 먼저 그곳으로 출발했고, 나는 10일 이상 사무실 비우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

2) 여기서 발표한 글은 이후 수정 보완되어 외국 학술지에 실렸다. Dong Choon Kim, 2004, *Forgotten War, Forgotten Massacre— The Korean War(1950-1953) as Licensed Mass Killings*,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2004) 6(4), pp. 523-544

3) 필자의 제 5회 제노사이드 학회 참관기는 「역사문제연구소 회보」, 제47호(2004.2) 참조바람.

4) 참석자 중에는 현 회장이나 제노사이드 연구로 유명한 차니(Israel Charney), 로버트 멜슨(Robert Melson), 리처드 초크(Richard Chalk) 등이 있었고, 이 외에도 사회운동연구자로 더 많이 알려진 사회학자 허버트 허쉬(Herbert Hirsch), 마틴 쇼(Martin Shaw)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쿠르드족 출신의 시인, 학자들도 있었고, 아르메니아 학살을 처음으로 인정한 미국 외교관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7월 9일부터 개최 예정인 사라예보 행사에만 참석하기로 했다.

어쨌든 나는 가장 최근에 대량학살이 발생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제노사이드 학회를 개최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면서 비행기에 올랐다. 1차 대전이 발발한 현장인 사라예보는 유럽과 아시아 문명의 접경지로서 가톨릭, 러시아 정교,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매우 유명한 도시이지만, 유고연방공화국 붕괴 이후 보스니아의 수도가 되었다. 보스니아가 동유럽권 나라들 중에서는 물론 구유고연방에 속했던 나라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매우 낙후된 곳이라서 그런지 교통편이 매우 불편했다.⁵⁾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는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헝가리 대사관이 이 나라를 관장하고 있었다. 이스탄불, 부다페스트, 파리, 비엔나, 밀라노 등 사라예보로 가는 직항노선이 있는 곳을 모두 알아보아도 대한항공이나 다른 외국 항공편과 쉽게 연결되는 노선을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경우는 갈아타는 곳에서 일박을 해야만 하는 노선들이었는데, 인터넷으로 수차례 조회한 끝에 갈아타는 곳에서 일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노선인 비엔나 경유 사라예보 노선을 겨우 찾아서 항공편 예약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항공편 역시 경유지에서 일박을 하지 않는다면 밀라노, 파리 두 곳이나 거쳐서 서울로 돌아오는 노선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예약하였다. 요컨대 보스니아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물론 관념상으로도 보통의 한국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먼 나라라는 점을 실감하였으며 세계화된 오늘의 시점에도 우리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을 느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비엔나에 도착한 이후 6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드디어 사라예보로 가는 프로펠러 비행기에 탑승했다. 2시간 정도

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지리적인 구분이다. 북쪽의 보스니아와 지중해에 가까운 헤르체고비나를 합해서 통상 보스니아라고 부른다. 보스니아는 약 430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북의 크로아티아, 옆의 세르비아, 남의 몬테네그로에 둘러싸였으며 산지가 많아 경작할 땅이 별로 없고, 따라서 주민들도 매우 가난하다. 인종적으로는 보스니아계(Bosniaks), 세르비아계(Serbs), 크로아티아계(Croat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내전시 서로 충돌하였다.

비행한 다음 사방이 컴컴해진 저녁 8시 넘어서야 사라예보에 도착하였는데, 사라예보 공항은 한국의 대구나 광주 공항보다도 더 규모가 작아보였는데 국제공항이라기보다는 시골 도시의 공항처럼 느껴졌다. 한국에서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 보스니아 공식화폐가 보스니아 마르크로 되어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공항 직원에게 이곳에서 유로달러를 사용하는지 물어보니 사용가능하다고 답했다. 10분 정도 택시를 달려서 행사장인 호텔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었다. 호텔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규모가 큰 장급 여관 같은 인상이었지만, 그 다음날 행사장에서 가서 그러한 편견은 바로 잡혔다. 이 국제행사를 위해 급히 공사를 한 흔적이 있었지만, 매우 큰 컨벤션 홀과 깨끗한 세미나 룸들이 잘 완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6개의 세미나 룸의 이름은 렘킨(Lemkin), 마커슨(Markusen) 등 그 동안 제노사이드 문제해결과 연구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의 이름을 딴 점이 흥미로웠다.

도착 다음날인 9일 오후부터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 학술 행사는 공식적으로는 7월 9일에서 13일까지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세미나는 주로 9일 오후부터 12일에 집중되었고, 그 중간인 11일에는 대표적인 학술지였으며 현재는 대규모 표역과 위령공원이 있는 포토차리(Potocari) 관광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10, 12, 13일에 개최되었다. 그런데 저녁식사 후에도 여러 가지 발표회, 시 낭송, 영상물 상연, 집담회 등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매우 다채롭다는 인상을 주기는 했으나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정도까지 강행군이 계속되었다. 우선 개회 행사를 비롯한 중요한 발표는 모두 4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컨벤션 룸에서 열렸고, 그 나머지는 50명 내외가 들어갈 수 있는 6개의 작은 방에서 열렸다. 즉 참가자가 아무리 열심히 이방 저방 돌아다니더라도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행사를 제외하고는 결국 전체 발표 중 1/6정도 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냥 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 행사는 국제제노사이드 학회와

사라예보 대학의 반인도적범죄 연구소, 국제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는데, 모든 행사 진행은 사라예보 대학 측에서 담당하였다. 아마도 발표자 선정을 비롯한 프로그램은 학회에서 담당하고 장소제공 및 경비는 학회 측의 모금과 보스니아 측에서 공동 부담한 것으로 보였다. 참가자들 역시 그곳의 숙식비는 각자 지불하게 되어 있었고 회비를 포함하여 약간의 참가비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대학원 학생 및 가난한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에게는 약간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방의 교수, 연구자,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대다수 참가자는 자비로 참가했다고 볼 수 있다.

2

우선 이 행사 자체가 90년대 세계의 최대 학살지인 보스니아에서 개최된 만큼 프로그램의 1/3정도는 보스니아 학살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는 큰 행사만도 첫날 개최행사의 국제유고법정(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 ICTY)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서, 유고법정의 수석검사 초빙 행사, 보스니아 대통령단(Member of Presidency)에 속한 대통령의 강연,⁶⁾ 보스니아 학살당시 목격자인 젊은이들의 증언대회를 비롯하여 구유고 지역의 학살과 관련해 다루어질 수 있는 모든 주제가 거론되었다. 많이 알려진 대로 구 유고지역에서의 학살은 사회주의 유고연방의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밀로세비치가 주도하는 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Great Serbia)이 같은 유고연방에 속해있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을 점령하여 이 지역을 강제로 세르비아에 편입시키려 함과 동시에 보스니아 무슬림계 사람들에게 대한 인종청소를 단행하였다. 이후 보스니아 무슬림 측의 저항세력과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들 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또 보스니아 지역

6) 보스니아는 인종적 대표성을 반영한 3명의 대통령으로 구성된 대통령단이 통치한다. 3명의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4년의 임기동안 8월 개월씩 돌아가며 직무를 수행한다.

내 거주하던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밀로세비치가 선동하는 인종청소 작업에 가담하면서 내전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93년 즈보르니크(Zvornik)와 스레브니카(Srebrenica) 중간 지대가 세르비아군에 의해 점령되자 이 지역 거주 보스니아 무슬림은 사람들은 스레브니카로 집단 피난을 감행하였고, 마침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지역을 비무장지대(safe area)로 선포하고 유엔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이 파견된 바로 그 현장에서 4만 명의 이주민에 대한 학살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으며, 유엔의 도덕적 권위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결국 유엔 보호하에서 5,000명 이상의 무슬림 민간인이 스레브니카에서 학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그것은 이후 시위자의 플래카드에 적힌 것처럼 유럽의 치욕이었다.⁷⁾ 아직 정확한 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20만에서 30만 사이의 보스니아 무슬림이 이 내전 기간 학살되었으며, 9,000여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확인된 집단 매장지만도 430개 이상이라고 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데, 참가자들이 보았던 포토차리도 그 중 하나였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전쟁기 경산이나 고양지역에서 그러했듯이 여기서도 폐광이 주로 집단매장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이였다.

내전이 진행 중이던 1993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고법정(ICTY)이 설치되었고, 유엔의 반인도적 범죄(the crimes against humanity)의 규정에 따라 학살의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등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은 얼마 전에 사망한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학살을 모의, 집행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은 물론, 이들이 보스니아에 거주하던 세르비아계 사람들을 뒤에서 지원해서 학살을 저지르도록 했다는 증거 역시 제대로 찾

7) 사진에 나온 시위대의 플래카드에는 "Srebrenica—Europe's Shame : 9000 missing and Murdered"라고 적혀 있다. 사건발행 후 3년 동안 실종자의 부인과 어머니들은 진실규명을 촉구하면서 '눈물의 강'을 흘렸지만 그들의 노력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지 못했다. 더구나 이렇게 대량의 학살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948 제노사이드 협약(Genocide Convention)을 충족시킬 정도의 조건(보스니아 무슬림 사람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조직적으로 파괴할 의도를 가졌는지의 여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⁸⁾ 그러나 세르비아 정부는 보스니아 지역 내의 세르비아계 준군사조직들이 무슬림들에 대해 인종청소를 자행한 사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세르비아는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전이 종식되었으나 사라예보 시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흉물스럽게 폭격 맞은 건물들과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한 포탄자국과 총탄자국들이 웅변적으로 보여주듯이 보스니아는 아직 내전과 학살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스니아 전역에서 실종자 찾기와 집단매장지 발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들의 DNA 검사를 거쳐서 사망자의 신원 확인이 되는 경우 포토차리의 집단묘지에 묻힌다. 한국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아마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는 향후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듯 했다.

이 행사 중 보스니아 학살에 대한 여러 세션의 토론에 모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구유고전범재판소의 수석검사인 스위스 출신 델 폰테(Carla Del Ponte)가 참석했던 전체 토론회가 인상적이었다.⁹⁾ 그녀는 발표에서 가해자 처벌의 어려움, 그리고 보스니아 학살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데 따르는 어려움 등을 토로하였다. 즉 보스니아 무슬림들에 대한 세르비아계의 집단이주 혹은 학살이 이들을 인종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8) 제노사이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제2조에는 제노사이드를 “국민, 인종, 민족, 종교 집단 전체 혹은 부분을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제노사이드 범죄로 간주되지 않게 된다.

9) 델 폰테는 스위스 출신으로서 스위스에서 대법원장을 역임하다가 유엔 산하 르완다전범재판소(ICTR)에서 검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사로서 역할을 하였다. 현재 르완다전범재판소 검사직은 사임하였고, 유고전범재판소 수석검사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사의를 표시한 상태다.

의도하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위해 배후세력이자 가해 측인 세르비아의 자료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다. 그녀의 고충은 결국 유엔전범재판소가 주권국가를 강제하거나 협조를 얻기 어려운 한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설명에 대해 보스니아 측 참가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우선 이 행사를 사실상 주관한 사라예보 대학의 철킅(Cekic) 교수가 그녀의 발표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반박성 질문을 했다. 그는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명시된 특별한 의도(specific intent)라는 것은 다분히 기술적인 용어인데 이는 ‘특정집단의 인간을 살해할 의도, 혹은 집단을 파괴할 의도’ 등으로 대단히 엄격하게 정의할 경우 가해의 의도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어떤 사람도 특정지역에서 사실상 살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리고 그는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라면 그것 역시 제노사이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였다. 한편 그는 이 법정이 중요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한 중요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피해자인 보스니아 측의 피해 사실들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이 법정이 피해자 측을 소홀하게 취급하였다는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다른 질문자들은 ICTY의 설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살의 예방에 있는데, 과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또 다른 질문자들은 ICTY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유엔 사무총장 등의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기도 했고, 마지막의 어떤 질문자는 보스니아 학살을 ‘제노사이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어쨌든 이 토론에서는 결국 유엔이 집단학살범죄자 처벌과 집단학살문제 해결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논점들이 제기되었다.

구유고지역의 집단학살에 대한 처리문제와 더불어 현재 진행형인 사례

로서 캄보디아의 재판사례도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캄보디아 관련 세션의 제목도 흥미로웠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은 아니다(Justice Delayed Should not Mean Justice Denied : Cambodia)”였다. 즉 사건 발생 후 30여년이 지났으므로 그것을 ‘지연된 정의’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 되지만,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이 곧 정의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 발표회에는 이 학회의 차기 회장이자 오랫동안 캄보디아 학살 문제에 개입하고 연구해온 그렉 스탠튼(Greg Stanton)이 좌장 역할을 했으며, 특별기구(ECCC : 약칭 Extraordinary Chambers :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for the Prosecution of Crime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c Kampuchea)의 사무국 산하 공공사무장(Chiefs of Public Affairs)인 헬렌 자비스(Helen Jarvis)가 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¹⁰⁾ 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미국 유학생이면서 현지의 NGO 활동가로서 피해자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콕 테이 응(Kok-Thay Eng)도 참석하였다.

우선 헬렌 자비스의 발표에 의하면 크메르 루즈 학살 문제 해결 노력은 1979년 정권 붕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초기 기초적인 증거수집 단계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증언이나 사진들이 수집되기 시작했고, 1994년에 와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학살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지도 제작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메콩강의 잦은 범람으로 많은 학살 매장지들이 유실되었고 증거가 인멸되었다고 한다. 결국 수백만의 학살사건이 발생하고도 가해자들은 재판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이후에도 권력권에 머물거나 거리를

10) 2001년 캄보디아 국회는 크메르 루즈가 집권했던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에 폴 포트 정권에 의해 자행된 300만 명에 대한 학살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이 기구는 유엔의 물질적 인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검사나 판사직에도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비스는 이 기구의 설치를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출신은 오스트레일리아이지만 현재 캄보디아 시민권을 갖고 있다. 특별기구의 연혁과 조직에 관해서는 http://www.eccc.gov.kh/english/about_eccc.aspx 참조.

활보하는 일이 지속되다가, 2001년 들어서서 특별기구설치법이 통과되었고, 2005년 들어서 예비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검사들이 임명되고 수집된 각종 자료가 검사들에게 인계되었다고 한다.¹¹⁾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기구의 재판정에는 외국인 검사나 판사들이 초빙되었는데 캄보디아가 이러한 전범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아마 이 법정은 재정적으로도 상당부분 유엔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는데, 어쨌든 주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판사와 검사의 구성에서 캄보디아인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했다고 한다.¹²⁾

이 법원의 한계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크메르 루즈 집권 당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던 4명의 중요 인물만이 기소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있지만, 발표자는 이 법정이 국민적 통합과 평화, 그리고 시민성을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NGO활동가 록 테이 응은 자신의 단체가 주로 미국 등 외국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과 부딪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주로 토로하였다. 한국과도 유사한 점이 있지만, 아직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빈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곧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당장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소수의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되묻는다고 한다. 그리고 불교의 전통이 강한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악인은 다음 세상에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으며, 지역사회에 살아 활보하는 하급 가해자들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나쁜 놈”으로 지목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처벌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결

11) 524개 릴(reel)의 마이크로 필름, 383,149의 페이지의 기록 증거물들이 검사들에게 전달되었다.

12) 7인의 검사 중 캄보디아인이 4인, 외국인인 3인을 차지했고, 판사 역시 그러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통상 과거청산관련 위원회가 그러하듯이 합의제의 원칙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국 그의 발표는 왜 이러한 대량학살이 발생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사회 내에서 어떠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반복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대한 약간의 답이 되었다. 사실 최상층부의 명령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이후 지역사회에서 반응이 어떠한지, 피해 전모에 대한 진실규명은 어떻게 되는지, 장차 중위 하위 수준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았으나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고 세션이 마무리되었다.

3

보스니아와 캄보디아의 두 사례를 제외하고는 행사 내내 주로 제노사이드 일반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필자가 참석했던 세션과 발표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 몇 가지 열거해보면 학살연구로 유명한 리처드 초크(Richard Chalk)가 발표한 “라디오와 제노사이드 : 비교연구”였다. 그는 나치 시대를 필두로 해서 집단학살이 발생했던 모든 현장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문자해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원래 집단학살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매체가 들어올 수 없는 전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전의 매체는 주로 라디오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는 이러한 가설과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는 르완다의 학살의 경우를 주로 분석하였는데, 라디오가 학살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되는 점을 주목하였다. 결국 그는 라디오를 통해서 전파되는 선전의 스크립트가 집단학살을 정당화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대단히 설득력 있게 분석하였다. 이 발표를 듣고 나서 한국 전쟁기의 라디오를 통해서 전파된 전쟁보도를 분석해보면 집단학살 연구에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접었다. 당시 인민군 측의 라디오 선전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충실하게 청취해서 정리한 문서들을 본 적이 있지만 한국 측의 라디오 선전에 대해서는 녹음 테이프는 물론 스크립트 등 어떤 기록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곧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첫날 처음 참석했던 세션 중에서 기억 남는 것은 “제노사이드, 세대간 변화 및 화해”라는 주제였다. 여기서는 여러 발표자들이 르완다 학살 목격 어린이들의 사례 등을 비롯하여 집단학살의 상처가 어린이, 혹은 피해자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남기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여 사건의 개발을 막을 것인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발표들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은 상처의 치유가 공동체의 복원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즉 집단학살이라는 것은 그 체험이 다음 세대로 이전 전승되면서 언제나 국가나 문화의 사회적 구성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점에서 트라우마(trauma)는 역사적 트라우마 혹은 문화적 트라우마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표자는 폭력의 정신적 피해 즉 트라우마의 극복은 문화의 재조직화 혹은 문화의 재활성화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현재 화해작업이 진행 중인 르완다에서 이러한 점들이 크게 이슈가 되는 듯했다. 물론 한국의 진실화해위의 용역조사에서도 한국전쟁 발발 후 57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자는 물론 가족들 중 상당수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tress)를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우리로서도 이러한 주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¹³⁾ 특히 아직 규모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7, 80년대 고문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겪는 상처에 대해서는 더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세션에서 철학자인 마수비안(Armen T. Marsoobian)의 발표 “제노사이드, 그 후(Genocide Aftermath)”라는 발표도 흥미 있었다. 그는 일본학자인 다카하시 데즈야(高橋哲哉)가 제기한 적이 있는 윗세대들의 가

13) 집단학살의 피해자 중 당자사는 38.9%가, 그리고 가족들의 경우 19.5%가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조사는 사례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심리건강연구소, 2007, 「심리적 피해 현황 조사보고서-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치료 및 재활 측면의 화해방안 모색」 참조.

해행위에 대한 아래세대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였다¹⁴⁾. 그는 통세대적 책임(Inter-generational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도덕적인 견지에서 윗세대의 학살 책임은 아래 세대로도 이전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제노사이드가 발생했던 맥락과 원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것이며, 제도 역시 집합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국가 간 혹은 집단 간에 진정한 화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집단학살 혹은 조직된 폭력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이 공유되어야 하고, 그것은 주로 교육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독일의 이웃나라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을 중요 사례로 언급하였다. 그의 저서를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주장을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지만 너무 도덕주의적인 그의 주장들이 좀 거슬려서 필자는 발표 후 약간의 반론성 질문을 제기하였다. 즉 나는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비도덕적이거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의 도덕적 책임의식보다는 제도 혹은 국가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반박하였다. 즉 나는 철학자인 그의 발표에 대해 정치가 도덕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자고 했지만 이후에 별로 시간이 나지 않아서 개인적인 대화를 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이후 또 한번의 세션에서 그는 인디언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도 거론하였는데, 미국 학자가 이러한 지적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의 지적인 용기에 점수를 주고 싶었다. 그의 저서를 읽어 보아야겠다는 숙제만 안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는 철학자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¹⁵⁾

12일에는 『전쟁과 제노사이드(War and Genocide)』의 저자로도 유명한 영국의 마틴 쇼(Martin Shaw)가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사회자의 소개

14) 다카하시 테츠야, 2000, 이규수 역,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다』, 역사비평사

15) 그는 미국 남코네티컷 주립대학의 철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의 저서의 제목은 2007, *Genocide's Aftermath : Repair and Responsibility*, Blackwell Publishing Limited이다.

로는 그가 최근에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What is Genocide?)』라는 저서를 출간했기 때문에 특별히 초청해서 그의 저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¹⁶⁾ 그의 저서 『전쟁과 제노사이드(War and Genocide)』는 이미 읽은바가 있어서 흥미를 갖고 참석하였는데, 그는 제노사이드 협약의 기초가 된 램킨(Lemkin)의 제노사이드 정의가 너무 협소하다는데서 출발을 하였다. 즉 램킨의 정의는 제노사이드의 개념이 “물리적 파괴”로만 모든 피해를 환원시키고 있는데, 경제, 문화, 정치적 파괴의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학자인 헬렌 페인(Helen Fein)의 이론을 예로 들었다¹⁷⁾. 즉 사회적 파괴의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종청소 등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청소(cleansing)의 개념 역시 너무 최대 기준(maximal standard)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결국 그는 제노사이드 연구가 유대인 대량학살(Holocaust)에서 출발해서 그것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그는 가해자의 의도에 못지않게 제노사이드 발생의 구조적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노사이드 현상을 다른 차원의 갈등과 연관 속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나서 후텐바하(Huttenbach)등이 제노사이드의 위계(The hierarchy of genocide)등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개념과는 별도로 통합성과 일관성을 갖는 새로운 제노사이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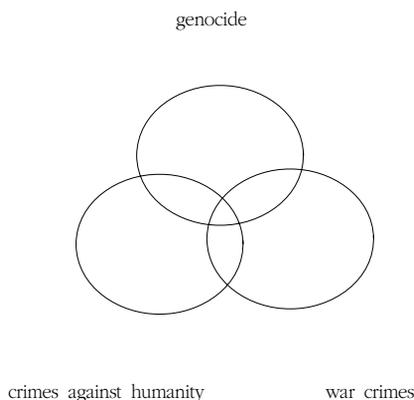
제노사이드를 넓게 정의하자는 그의 주장에 대해 많은 반론이 제기되

16) Martin Shaw, 2007, *What is Genocide*, London : Polity Press 소의 홈페이지에는 그의 글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www.martinshaw.org

17) 아마 그녀의 저서 Helen Fein, 1993, *Genocide : A Soci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 Sage Publication Ltd.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였다.

18) 제노사이드 연구자인 후텐바하가 어느 지면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위키피디아 사전에는 1988년에 그가 “Locating the Holocaust on the genocide spectrum : towards a methodology of definition and categorization”(Holocaust and Genocide Studies. Vol 3, No 3, pp. 389~403)라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나와 있다.

었다. 리처드 초크는 만약 그렇게 정의한다면 제노사이드 개념의 유용성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그의 제노사이드 정의는 개념적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비판하였다. 즉 그의 정의를 따르자면 제노사이드와 다른 형태의 전쟁범죄, 혹은 폭력과의 경계선이 대단히 불분명해진다는 지적이었다. 여기서 데이비드 쉐퍼(David Scheffer)의 세 개의 원의 도식이 언급되기도 했다. 쉐퍼의 도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원이 서로 겹쳐져 있는 모델인데, 흔히 전쟁기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법적 적용시 주로 동원되는 심각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제노사이드는 서로 간에 중첩되기도 하고 별개로 존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어쨌든 쇼의 발표는 나로서는 이번 행사 중에서 가장 속 시원한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인종적으로 매우 복잡한 유럽의 유대인 집단학살은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집단학살의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의 특수한 사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으며, 아시아의 사례를 통해서 그 개념은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동아시아의 국가폭력의 경우 유럽의 경우에 비해

종교, 인종보다는 정치적 변수가 훨씬 중요하고 따라서 인종적 차별에 입각한 제노사이드의 개념은 보다 큰 보편 속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평소의 나의 생각을 그가 대변해 주었다.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그의 발표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나의 이러한 생각을 전달하였다. 물론 그의 새 저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What is Genocide?)』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

이외에도 필자가 참석했던 세션은 학살의 사회심리적 조건을 주로 거론한 “제노사이드의 마음(Genocidal Mind)”, 혹은 보스니아 등지에서의 학살 이후 심리적 피해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비교제노사이드 연구의 장점과 단점 등을 다룬 학술적 논의들 등이었다. 국제제노사이드학회(IAGS)의 미래라는 주제의 집담회도 흥미로웠는데 구성원들은 각 나라의 사례와 일반 이론의 결합, 그리고 학자와 활동가들의 결합 필요성 등이 거론되었다.

필자는 마지막 날의 작은 세션에서 한국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제목은 “한국 과거청산에서 유족이라는 변수 - 누구의 진실이며 어떤 보상인가? (The factor of the Bereaved Families toward the Way of Past Dealing in South Korea - Whose Truth and What Reparation?)”¹⁹⁾ 아직은 한국에서는 본격 거론하기 좀 민감한 주제이기는 하나, 외국인이 청중인 국제학회라서 약간 주저 끝에 이 주제를 정리해서 발표하였다. 내용은 유족들의 목소리가 과거청산 운동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적극 인정하면서, 단지 그들이 과거의 집단학살과 반공주의하에서의 피해의식 때문에 서로 간에 과도하게 분열되어 있고, 그 분열의 배경에는 ‘순수민간인(pure citizen)’의 담론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반공체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학살 유족의 논리가 ‘순수 민간인’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집단학살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지배체제 혹은 지배집단을

19) 발표문 원문은 필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dckim.skhu.ac.kr>

인정하거나 가해세력과 타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일단 입법화가 된 이후에는 진실규명보다는 개인적 보상을 앞세우는 행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유족의 체험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어야하는 경험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공공적 지식으로 일반화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한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 역시 언급하였다.

나의 이 발표는 행사 마지막 날의 거의 마지막 시간에 배치되어 참석자도 많지 않았으며 토론도 거의 없었다. 단지 보스니아 측 발표자가 대단히 흥미 있어 하면서 한국의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한국 측에서 여러 명이 발표자로 참가했다면 별도의 세션을 배정받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다.

4

제노사이드 학회 자체가 그렇지만 이번 행사 역시 사실상 북미 대학에 재직하는 유대인 출신 학자들과 제노사이드 문제 전문가들의 잔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에서 1, 2명이 참석하였고, 쿠르드족 출신자도 참석하였지만 아시아, 남미권 학자, 활동가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 사례도 하나의 세션이 배정되어 있었고 발표 예정자도 이름이 올라 있었으나 참석을 하지 않았다. 지난번 대회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안면이 있는 몇 학자들은 내가 참석한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인사를 하였지만, 나에게 그들의 인사는 결국 이 행사가 실질적인 국제행사임을 과시하는 장식용으로 나의 참석이 필요했다는 정도로만 들렸다. 물론 제노사이드 연구가 주로 유대인 학살에서 시작되었고, 홀로코스트 산업이라고 호평을 받을 정도로 미국과 유럽에서 매우 인기 있는 연구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나 집단학살에서도 학문제국주의는 여전히 작

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행사 중 코소보 출신의 어떤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는 이 행사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즉 이 행사는 사라예보에서 열렸다는 것만 의의가 있지, 실제 참석자나 발표내용은 현지의 학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발표자도 엄격하게 선별되었으며 실제 보스니아나 구유고 연방의 역사나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거의 토론되지 않았다고 꾸짖을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발표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손님(guest)’이라고 적힌 명패를 보여주었다. 주최 측이 재정지원을 얻기 위해 여러 민감한 주제를 배제하고 또 보스니아 내의 다른 목소리를 차단했는지 나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대다수의 보스니아 출신 학자나 관리들은 행사 내내 주변에만 빙빙 돌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학회의 신규임원들 소개하고 공로자에게 시상하고, 서로 간에 칭찬하고 퇴임, 신입 인사하면서 저녁 식사 후 거의 2시간 이상을 보낸 마지막 날의 리셉션에서 피로감이 겹쳐 내 짜증은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갔다.

물론 영어가 사실상 국제어가 되었고, 모든 국제학술 행사가 영어로 진행되는 것 자체도 비영어권 사람들의 참여를 막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실제 발표된 논문 역시 90% 이상이 영어논문이므로 독일이나 프랑스 참가자도 가물에 콩 나듯이 있을 정도였다.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아시아 쪽 사람들이 참가해서 이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이 들었다. 결국 일본제국주의와 미국 주도의 냉전의 경험을 공유한 동아시아권 국가들은 별도의 모임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광주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에서 그것을 주도할 연구자나 활동가, 정부관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리더쉽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기업가, 관리자 학자들이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사정을 돌아보면 역시 답답한 느낌 밖에 없다. 진실화해위

원회 역시 국제업무 담당 직원 한 사람 없는 실정이다. 영문 홈페이지도 짜라 하기 그지없다. 90년대 이후는 학살연구의 거의 폭발기라 부를 수 있지만, 한국에서 국제학회에 내놓을만한 논문을 쓴 연구자 한 사람 없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집단학살 연구자가 아닌 단순한 한국전쟁 연구자인 내가 영어도 서투른 처지에 우연하게 이 학회에 관계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정부기구의 담당자가 되어 건문을 넓히고 추후에 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때문에 참석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시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이 번 행사 중에도 인도네시아 1965년 집단학살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상영했는데, 내레이터가 작년 독일에서 만난 적이 있는 인도네시아 역사학자였다. 그가 주도해서 만든 인도네시아의 연구소에서 그 동안 전혀 조사되지 않았던 1965년 수하르토 집권과정의 학살이 본격적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가한 캄보디아의 젊은 활동가의 모습도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아직 베트남 전쟁 당시 학살에 대해 베트남인들이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먼저 고민했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한국 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 보다 국제적인 감각을 갖는 한국의 30대 젊은 활동가나 학자들이 이러한 행사에 더욱 활발하게 참석해서 한국의 사례를 국제화하고 또 일반 이론의 지평에서 그들과 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0년 정도 이내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주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